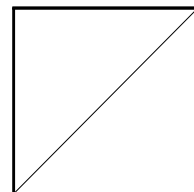


3년 비공개



의안번호	제 282 호
의 결 연 월 일	2019. 10. 30. (제 19 차)

의
결
사
항

(주)매일방송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증권선물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손 병 두
제출 연월일	2019. 10. 30.

1. 의결주문

(주)매일방송의 제19기(2011.1.1.~2011.12.31.)부터 제24기(2016.1.1.~2016.12.31.)까지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 조치안을 **별지1** 및 **별지2**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주)매일방송의 제19기(2011.1.1.~2011.12.31.)부터 제24기(2016.1.1.~2016.12.31.)까지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 발견된 위법사실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주)매일방송에 대한 조치안

지적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기금융상품 허위계상 및 자기주식 미인식 등 (① 단기금융상품 허위계상 및 자기주식 미인식: '11년 54,994백만원, '12년 3분기 54,994백만원, ② 재무활동현금흐름 과대(과소)계상: '11년 54,994백만원, '12년 △54,994백만원)○ 담보 및 지급보증 주석 미기재 (① 담보: '12년 90,000백만원, ② 지급보증: '11년 4,000백만원, '12년 67,442백만원, '13년 69,193백만원, '14년 69,193백만원, '15년 69,193백만원, '16년 69,288백만원)
조치 내용 *1,*2,*3,*4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징금 70백만원○ 감사인지정 3년○ 前대표이사 해임권고 (現미등기임원 000)○ 검찰고발 (회사, 000, 000, 000)

*1 현행 양정기준에 의한 조치수준이 위반행위 발생당시 양정기준에 의한 조치수준보다 낮아 현행 양정기준을 적용

*2 동기관단(현행 양정기준에 의한 동기관단)

가. 단기금융상품 허위계상 및 자기주식 미인식 등 : **고의**

나. 담보 및 지급보증 주석 미기재 : **중과실**

*3 기본조치의 가중·감경(현행 양정기준에 의한 가중 및 감경 적용) : 해당사항 없음

- 가중사유 : 해당사항 없음(동 건 위법행위 이전 5년 이내에 조치를 받은 사실 등이 없음)
- 감경사유 : **담보**에 대해서는 '12년 주석에서 누락하였으나, '13년부터 기재하였으므로 감독당국에서 위법사실을 인지하기 전 자진정정한 것으로 보아 **1단계 감경**을 적용하였으나, **최종 조치수준(고의 I)**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

*4 現미등기임원(前대표이사, 現그룹회장) 〇〇〇에 대하여 “해임권고” 조치하고, 前대표이사겸 재무담당임원 〇〇〇은 이미 퇴직하였으므로 해임권고를 “**퇴직자 위법 사실 통보**”로 갈음 [“사실의 통지”로서 개별 금융업법상 임원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음]

*5 前대표이사겸 재무담당임원 〇〇〇('11년), 現그룹부회장('11년~현재)겸 前감사('11년~'17년) 〇〇〇, 現그룹회장('11년~현재)겸 前대표이사('11년~'17년) 〇〇〇은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분식을 수행한 자에 해당하므로 “**검찰고발**” 조치

※ 참고사항

1. 회사의 위법행위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종합편성방송채널 사업 승인**과 관련될 수 있으므로 동 내용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업무 정보사항**으로 송부
2. 회사가 '12.11월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여 자기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받은 **상법위반**(제341조의3, 제625조) 혐의 및 '11.4월과 '17.1~2월 **상법상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상법위반**(제341조, 제625조) 혐의에 대하여 **검찰**에 **업무 정보사항**으로 송부

나. OO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안

<p>지적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기금융상품 및 자기주식 등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① 단기금융상품 허위계상 및 자기주식 미인식: '11년 54,994백만원, ② 재무활동현금흐름 과대(과소)계상: '11년 54,994백만원, '12년 △54,994백만원) ○ 담보 및 지급보증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① 담보: '12년 90,000백만원, ② 지급보증: '11년 4,000백만원, '12년 67,442백만원, '13년 69,193백만원, '14년 69,193백만원, '15년 69,193 백만원, '16년 69,288백만원)
<p>조치 내용 *1,*2,*3,*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O회계법인(고의 I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100% -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5년 ※ 지정제외점수 200점 ○ 공인회계사 OOO(고의 I 단계) ['11년 주책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취소 건의 (시효만료) - 검찰고발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5년 -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20시간 ○ 공인회계사 OOO(고의 I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11년 보조책임자, '12~'16년 주·보조책임자] - 등록취소 건의 (시효만료) - 검찰고발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5년 -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20시간

*1 위반행위 발생당시 양정기준에 의한 조치수준이 현행 양정기준에 의한 조치수준보다 낮아 위반행위 발생당시 양정기준을 적용

*2 동기판단(위반행위 발생당시 양정기준에 의한 동기판단)

가. 단기금융상품 및 자기주식 등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 **고의**

나. 담보 및 지급보증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 **중과실**

*3 기본조치의 가중·감경(위반행위 발생당시 양정기준에 의한 가중 및 감경 적용)
: 해당사항 없음

- 가중사유 : 해당사항 없음(동 건 위법행위 이전 2년 이내에 조치를 받은 사실 등이 없음)
- 감경사유 : **담보**에 대해서는 감독당국에서 위법사실을 인지하기 전 회사의 자진정정에 조력한 것으로 보아 **2단계 감경**을 적용하고, **지급보증**에 대해서는 감독당국에서 위법사실을 인지한 후, 감리 착수이전에 회사가 위법사항을 수정하여 공시하는데 조력한 것으로 보아 **1단계 감경**을 적용하나, **최종 조치 수준(고의 I)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

*4 000은 '11년에 형식상으로는 보조책임자로서 감사업무에 참여하였으나, 실질적으로 회사는 주책임자(000)가 아닌 000의 주요 감사고객으로 회사의 위법행위와 관련된 감사절차를 모두 000이 직접 수행하였고, 회사가 주식 취득의 주체라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영진의 부정 징후를 인지한 후 이에 대한 충분한 감사절차를 수행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000도 주책임자에 준하는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바, 보조책임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1단계 감경**을 적용하지 **아니함** [舊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VII.1.나]

4. 참고사항

가. 제10차 감리위원회(2019.8.29.) 및 제11차 감리위원회(2019.9.19.) 심의필

※ 금융감독원장이 안전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나. 관계법규 (**붙임1**)

(별지1)

(주)매일방송에 대한 조치안

증권선물위원회는 舊「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주)매일방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 (주)매일방송

- 대표이사 : 000, 000
- 법인등록번호 : 0000000-00000000
- 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00
- 본점 소재지 : 000000 00 000 000 00000000

2. 조치내용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 제3항에 의하여

- (주)매일방송에 과징금 70,000,000원을 부과한다.

☐ 舊「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및 舊「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 (주)매일방송은 2020회계연도(2020.1.1.~2020.12.31.)부터 2022회계연도(2022.1.1.~2022.12.31.)에 대하여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 (주)매일방송의 現미등기임원(前대표이사)인 000을 임원에서 해임할 것을 권고한다.

☐ 舊「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1조, 舊「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56조 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4조, 제444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5조의 규정에 의하여

- (주)매일방송 및 現그룹회장(前대표이사) 〇〇〇, 前대표이사겸 前재무담당임원 〇〇〇, 現그룹부회장(前감사) 〇〇〇을 검찰에 고발한다.

3.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주)매일방송(이하 '회사')는 제19기(2011.1.1.~2011.12.31.)부터 제24기(2016.1.1.~2016.12.31.)까지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舊「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함
 - 단기금융상품 허위계상 및 자기주식 미인식 등
 - (① 단기금융상품 허위계상 및 자기주식 미인식: '11년 54,994백만원, '12년 3분기 54,994백만원, ② 재무활동현금흐름 과대(과소)계상: '11년 54,994백만원, '12년 △54,994백만원)
 - 회사는 '11.4월 유상증자를 통하여 외부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회사 자금으로 회사주식(자기주식)을 취득하였음에도,
 - 증자에 소요된 자금을 가공의 자산[단기금융상품(정기예금)]으로 허위 계상함으로써 자기주식을 인식하지 아니하여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하고,
 - 자기주식 취득(처분)금액을 현금흐름표상 재무활동현금흐름으로 표시하여야 함에도 투자활동현금흐름으로 잘못 표시함으로써 재무활동현금흐름을 과대(과소)계상한 사실이 있음
- 담보 및 지급보증 주석 미기재
 - (① 담보: '12년 90,000백만원, ② 지급보증: '11년 4,000백만원, '12년 67,442백만원, '13년 69,193백만원, '14년 69,193백만원, '15년 69,193백만원, '16년 69,288백만원)
- 회사는 '11.4월 및 '12.11월 회사 직원들 및 계열사 직원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때,
- 직원들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담보 및 지급보증을 제공하였음에도 이를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舊「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 회사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고, 재무제표는 경제적 사실과 거래의 실질을 반영하여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등을 공정하게 표시하여야 함

□ 舊「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

- 증선위는 회사가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① 1년 이내의 기간의 유가증권의 발행 제한, ② 임원의 해임권고, ③ 3년 이내의 기간의 감사인 지정 또는 변경요구, ④ 경고 또는 주의, ⑤ 시정요구, 각서(회계처리기준의 성실한 준수를 확약하는 내용이어야 한다)제출요구 등 기타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舊「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56조

- 증선위는 감리결과 업무집행지시자나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고의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경우에는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할 수 있음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

- 2019년 4월 1일 이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치등을 하는 경우에는 2018년 11월 1일 전부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르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피조사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함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 문단 2.85, 문단 실2.20

- 주식에는 재무제표 본문에 표시된 항목에 대한 보충정보를 재무제표의 배열 및 재무제표 본문에 표시된 순서에 따라 공시함
- 보충정보의 예에는 자기 또는 타인을 위하여 제공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제공받고 있는 담보 및 보증의 내용이 포함됨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용어의 정의, 문단 6.4, 문단 실6.13

- 금융상품은 거래당사자에게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동시에 발생시키는 계약으로 금융자산은 현금 등을 수취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금융자산을 교환할 수 있는 계약상의 권리이며, 금융부채는 현금 등을 지급하거나 불리한 조건으로 금융자산을 교환해야 하는 계약상의 의무임
-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는 금융상품의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재무상태표에 인식하며, 금융부채는 채무자가 현금 등을 채권자에게 제공하여 부채를 이행하거나 채무자가 채권자에게서 또는 법적 절차에 따라 부채에 대한 1차적 의무를 법적으로 유효하게 면제받은 경우에 소멸함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4장 문단 14.21

-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거의 없더라도 타인에게 제공한 지급 보증 또는 이와 유사한 보증은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함

□ 「재무회계개념체계」 문단 11, 문단 46, 문단 48

- 경영자는 회계기준에 근거하여 진술되고 적정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하며, 회계 정보는 그 정보가 나타내고자 하는 대상을 충실히 표현하고 있어야 함
- 표현의 충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회계처리대상이 되는 거래나 사건의 형식 보다는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보고하여야 하며, 거래나 사건의 경제적 실질은 법정 형식 또는 외관상의 형식과 항상 일치하지는 않음

(별지2)

OO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안

증권선물위원회는 舊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OO 회계법인 및 그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 OO회계법인

- 대표이사 : 000
- 법인등록번호 : 0000000-00000000
- 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00
- 본점 소재지 : 00000 000 000 000 0000 000

☐ 000 [제19기 주책임자, 담당이사]

- 생년월일 : 00.00.00.
- 공인회계사 등록번호 : 0000
- 주 소 : 00000 000 0000 000 00000000 0000 00000

☐ 000 [제19기 보조책임자, 제20기~제24기 주·보조책임자]

- 생년월일 : 00.00.00.
- 공인회계사 등록번호 : 0000
- 주 소 : 000 000 000 0000 000 00000000 0000 00000

2. 조치내용

- ☐ 舊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및 舊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 OO회계법인은 (주)매일방송으로부터 받았거나 받기로 한 2011회계연도 감사보수액의 100%를 조치서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손해배상공동기금으로 추가 적립하여야 하며,
- OO회계법인은 (주)매일방송의 2020회계연도(2020.1.1.~2020.12.31.)부터 2024회계연도(2024.1.1.~2024.12.31.)까지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업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감사인지정 제외점수 200점

□ 舊「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및 舊「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 공인회계사 000은 (주)매일방송의 2020회계연도(2020.1.1.~2020.12.31.)부터 2024회계연도(2024.1.1.~2024.12.31.)까지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업무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 조치서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결산일이 도래하는 주권상장법인 및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되며,
 -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실시하는 정기연수 이외의 직무연수를 조치서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20시간 이수하여야 한다.
- 공인회계사 000은 (주)매일방송의 2020회계연도(2020.1.1.~2020.12.31.)부터 2024회계연도(2024.1.1.~2024.12.31.)까지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업무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 조치서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결산일이 도래하는 주권상장법인 및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되며,
 -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실시하는 정기연수 이외의 직무연수를 조치서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20시간 이수하여야 한다.

□ 舊「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舊「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 공인회계사 000, 공인회계사 000을 검찰에 고발한다.

3.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OO회계법인(이하 '감사인')은 (주)매일방송(이하 '회사')의 제19기(2011.1.1.~2011.12.31.)부터 제24기(2016.1.1.~2016.12.31.)까지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舊「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함
 - 단기금융상품 및 자기주식 등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① 단기금융상품 허위계상 및 자기주식 미인식: '11년 54,994백만원, ② 재무활동 현금흐름 과대(과소)계상: '11년 54,994백만원, '12년 △54,994백만원)
 - 감사인은 회사가 회사자금으로 회사주식(자기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재무상태표상 가공의 자산[단기금융상품(정기예금)]을 허위 계상하고,
 - 현금흐름표상 재무활동현금흐름인 자기주식 취득·처분금액을 투자활동현금흐름인 단기금융상품 증가·감소로 잘못 표시하였음에도,
 -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묵인함으로써 이를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 담보 및 지급보증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① 담보: '12년 90,000백만원, ② 지급보증: '11년 4,000백만원, '12년 67,442백만원, '13년 69,193백만원, '14년 69,193백만원, '15년 69,193백만원, '16년 69,288백만원)
 - 감사인은 회사 직원들 및 계열사 직원들의 금융기관 차입을 위하여 회사가 금융기관에 제공한 담보 및 지급보증 내역을 주식에 기재하지 않았음에도,
 - 은행조회서, 은행연합회자료 및 여신서류 검토 등의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舊「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회계감사기준」 200, 500
 - 상기 규정에 의하면 감사인은 회계감사기준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 시킬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업무를 계획하고 수행하여야 하고,

- 감사의견 형성의 기초가 될 합리적인 감사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하여야 함

□ 舊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

-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제5조 회계감사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면 해당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등록취소 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업무 또는 직무의 정지를 명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거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권상장법인(감사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4조의3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회사 및 특정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舊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4항

- 증선위는 감사인에 대한 감리결과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치를 한 경우 당해 위반행위의 정도에 따라 감사인에 대하여 일정한 지정제외점수를 부여하고 이를 근거로 감사인 지정시 참작할 수 있음

□ 舊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53조

- 증선위는 감사인이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① 회계법인의 등록취소, 회계법인에 대한 1년 이내의 기간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감사반의 등록취소를 금융위에 처분건의 할 수 있으며, ② 위반행위로 인하여 조치받은 당해 회사에 대한 5년 이내의 감사업무제한, ③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추가적립, ④ 경고 또는 주의, ⑤시정요구 또는 각서제출 요구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舊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54조

- 증선위는 공인회계사가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① 공인회계사의 등록취소, 공인회계사에 대한 2년 이내의 기간의 직무정지를 금융위에 처분건의 할 수 있으며, ② 조치서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결산일이 도래하는 주권상장법인 및 증선위가 감사인을 지정한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③ 위반행위로 인하여 조치받은 당해 회사에 대한 5년 이내의 감사업무제한, ④ 20시간 이내의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실시하는 직무연수, ⑤ 경고 또는 주의, ⑥ 시정요구, 각서 제출요구 등 기타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舊「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56조

- 증선위는 감리결과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고의로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를 한 경우에는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할 수 있음

(붙임1)

관계법규

□ 「舊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회계감사기준) ① 감사인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3조(회계처리의 기준) ① ~ ② <생략>

③ 회사는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 ⑥ <생략>

제15조(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업무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를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사보고서의 감리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한다.

② 삭제

③ 이 법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④ 증권선물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권선물위원장, 금융감독원의 원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⑤ <생략>

⑥ 삭제

제15조의2(자료의 제출요구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회사 또는 관계회사와 감사인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또는 보고를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회사 또는 관계회사의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업무와 재산상태의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제16조(감사인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등록취소 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업무 또는 직무의 정지를 명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거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권상장법인(감사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4조의3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회사 및 특정 회사에 대한 감사 업무를 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3조제2항·제4항, 제3조의2제1항, 제5조제1항, 제8조제1항, 제9조, 제10조제1항·제2항, 제11조, 제14조제3항 또는 제17조의2제1항을 위반한 경우

2. ~ 4. <생 략>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회사의 주주총회에 대하여 임원의 해임권고, 일정 기간 유가증권의 발행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 2. <생 략>

3.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제13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경우

4. ~ 5. <생 략>

제20조 (벌칙) ① 「상법」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나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제13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 ④ <생 략>

⑤ 삭제

□ 「新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회계처리기준)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권선물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회사의 회계처리기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정한다.

1.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

2.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정한 회계처리기준

② 제1항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은 회사의 회계처리와 감사인의 회계감사에 통일성과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의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회사의 범위와 회계처리기준의 적용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 ⑦ <생 략>

제16조(회계감사기준) ① 감사인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26조(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업무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제23조제1항에 따라 감사인이 제출한 감사보고서에 대하여 제16조에 따른 회계 감사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
 2. 제23조제3항에 따라 회사가 제출한 재무제표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 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
 3. ~ 4. <생 략>
- ② 이 법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증권 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27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회사 또는 관계회사와 감사인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 술 또는 보고를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회사 또는 관계회사의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업무와 재산상 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 또는 관계회사에 대한 업무와 재산상태 의 조사는 업무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 ④ <생 략>

제29조(회사 및 감사인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회사에 임원의 해임 또는 면직 권고, 6개월 이내 의 직무정지, 일정 기간 증권의 발행제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 제표를 작성한 경우
2. 제6조, 제1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2조제2항, 제22조제6항 또는 제23조제3 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 5. <생 략>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퇴임하거나 퇴직한 임원이 해당 회사에 재임 또는 재직 중이 었더라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받았을 것으 로 인정되는 조치의 내용을 해당 회사에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회 사는 그 사실을 해당 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이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 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해당 감사인의 등록을 취소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
2.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
3. 제32조에 따른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명령
4.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한 감사업 무 제한

가. 제11조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회사

나. 그 밖에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특정 회사

5. 경고

6. 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④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대표이사를 포함한다)가 별표 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인회계사 등록을 취소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

2.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직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

3.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가. 주권상장법인

나.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다. 제11조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회사

라. 그 밖에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특정 회사

4. 경고

5. 주의

6.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⑤ ~ ⑦ <생략>

제39조(벌칙) ① 「상법」 제401조의2제1항 및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나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거나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회사의 재무제표상 손익 또는 자기자본 금액이 자산총액의 일정 비중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변경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각각 가중할 수 있다. 다만, 자산총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1. 재무제표상 변경된 금액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재무제표상 변경된 금액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舊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조(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업무)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의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1.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회사가 제출한 재무제표에 대하여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의 준수 여부를 심사한 결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이해관계인 또는 기관의 통보 등에 따라 인지한 회계처리기준 위반혐의가 있는 경우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를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하였는지 여부를 법 제15조의2에 따른 방법으로 행한다.

③ <생략>

제9조(증권선물위원회의 권한 위임 등) ①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회사의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업무와 재산상태의 조사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에 따른 조치중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미한 조치에 관한 사항

②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선물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증권선물위원회의 결정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법·이영,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의 규정이나 명령 등에 따라 그 처리기준이 명확하고 별도의 의사결정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생략>

4.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요구 및 조사업무 등의 집행에 관한 사항

5. <생략>

③ ~ ⑧ <생략>

□ 「舊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48조(감사보고서 감리의 실시) ① 증선위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감사보고서(연결재무제표 및 결합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감리(이하 "감사보고서 감리"라 한다)를 실시한다.

1. <생략>

2. 금융위·증선위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회계처리기준 또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감사기준(이하 "회계감사기준"이라 한다)을 위반한 혐의가 발견된 경우

3. ~ 4. <생략>

② <생략>

③ 증선위는 감사인의 공정한 감사를 유도하기 위하여 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전산재무분석시스템을 활용한 계량적 분석 방법이나 무작위 표본추출 등의 방법에 의하여 선정한 회사,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회사의 감사보고서를 대상으로 감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1조 (조사) ① 증선위는 감리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법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출, 질문서·문답서 등에 의한 의견의 진술 또는 보고의 요구 <개정 2004.6.16>
2. 법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업무와 재산상태의 조사
3. 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의 협조요청 <개정 2001.4.18>

② 증선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과정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증권·선물조사업무규정에 의한 조사를 병행할 수 있다.

제52조(감리결과등의 처리) ① 증선위위원장은 감리결과 회계처리기준·회계감사기준 위반등 법 위반행위(이하 “위법행위”라 한다)가 발견된 경우에는 이 절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결과보고 및 처리안을 작성하여 증선위에 부의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53조 (감사인에 대한 조치) ① 증선위는 감사인이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금융위에의 처분건의
가. 회계법인의 등록취소
나. 회계법인에 대한 1년이내의 기간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다. <생 략>
2. 삭제
3. 위법행위로 인하여 조치받은 당해 회사에 대한 5년 이내의 감사업무제한
4. 영 제17조의9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추가적립(감사인의 지적사항과 관련한 회사로부터 받았거나 받기로 한 감사보수액을 한도로 한다)
5. 경고 또는 주의
6. 시정요구, 각서(회계감사기준의 성실한 준수를 확약하는 내용이어야 한다)제출요구 등 기타의 필요한 조치

② ~ ③ 삭제

제54조(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 ① 증선위는 공인회계사가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금융위에의 처분건의

가. 등록취소

나. 2년이내의 기간의 직무정지

2. 조치서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결산일이 도래하는 주권상장법인 및 증선위가 감사인을 지정한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조치받은 당해 회사에 대한 5년 이내의 감사업무제한
4. 20시간이내의 공인회계사회가 실시하는 직무연수
5. 경고 또는 주의
6. 시정요구, 각서(회계감사기준의 성실한 준수를 확약하는 내용이어야 한다)제출요구 등 기타의 필요한 조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담당이사를 주책임자로 하여 조치하고, 당해업무를 보조한 공인회계사(이하 “담당공인회계사”라 한다)를 보조책임자로 하여(감사반의 경우에는 해당 감사업무에 참여한 공인회계사 중 주된 책임이 있는 자를 주책임자로 하고 그 외의 자를 보조책임자로 한다) 조치한다. 다만, 주책임자와 보조책임자를 구분하여 조치하는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책임자에게 제1항제1호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위법행위 당시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중 다음 각 호의 자가 감독책임을 소홀히 한 경우에도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당해 감사보고서에 서명한 대표이사
2. 담당이사의 지시·위임에 따라 담당공인회계사를 감독할 위치에 있는 공인회계사

제55조(회사에 대한 조치) ① 증선위는 회사가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1년이내의 기간의 유가증권의 발행제한
2. 임원의 해임권고 및 관계자의 해고권고
3. 3년 이내의 기간의 감사인 지정 또는 변경요구
4. 경고 또는 주의
5. 시정요구, 각서(회계처리기준의 성실한 준수를 확약하는 내용이어야 한다)제출요구 등 기타의 필요한 조치

② <생략>

제56조(고발등) ① 증선위는 감리결과 고의로 법 제20조제1항 내지 제3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행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다만, 위법행위의 동기·원인·결과 등에 비추어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검찰통보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증선위는 위법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으나 제반정황으로 보아 형사벌칙의 대상이 되는 위법행위가 있다는 상당한 의심이 가고 사건의 성격상 수사기관의 강제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57조(조치기준) 증선위가 제53조부터 제5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위법행위와 관련된 금액의 크기 등 중요도, 고의성의 유무 및 과실의 정도에 따라 조치의 내용을 달리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법행위의 중요도가 일정수준 미만인 때에는 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 4. <삭 제>

제58조(조치의 가감 및 병과 등) ① 감사인·공인회계사 또는 회사가 감사보고서 감리결과(공인회계사회의 위탁감리결과 포함) 조치를 받고, 그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조치를 가중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삭제

④ 증선위는 감사인·공인회계사 또는 회사에 대하여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위법행위의 질적 특성 및 발생원인·결과·방법 등 정상을 참작하여 조치를 가중 또는 감면할 수 있다.

⑤ ~ ⑥ 삭제

제60조(사전통지) ① 증선위(부과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과징금부과의 조치인 경우에는 금융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이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할 경우에는 조치예정일 10일전까지 당사자등(조치의 상대가 되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을 말하며, 회사의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 및 관계자의 해고권고의 경우에는 그 임원, 관계자 또는 그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5. 23., 2010. 5. 27.>

1. 조치의 제목

2. 조치대상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조치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조치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생 략>

제60조의2(의견제출) ① 당사자등은 증선위가 이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기 전에 증선위에 서면·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② 당사자등이 정당한 이유없이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증선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

1. 제6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당사자등이 의견제출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 [본조신설 2006. 9. 13.]

□ 「新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감리등의 착수) ① 감리집행기관은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무제표 감리를 실시할 수 있다.

1. 회사(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가 아닌 회사로서 지정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고 있는 회사는 제외한다)가 다음 각 목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전산시스템에 의한 분석 등을 통해 회계처리기준 위반 가능성 또는 예방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 나. 재무제표 감리 또는 재무제표 심사(감리집행기관이 회사의 공시된 재무제표 등에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이 있는지를 검토하여 발견된 특이사항에 대한 회사의 소명을 들은 후에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재무제표의 수정을 권고하는 업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받은 후 경과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무작위로 표본을 추출한 결과 선정된 경우
2. 재무제표 심사를 수행한 결과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가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경우
 - 나. 재무제표 심사를 시작한 날부터 과거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경고를 2회 이상 받은 상태에서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가 발견된 경우
 - 다. 감리집행기관이 회사의 공시된 재무제표에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있다고 판단하여 그 재무제표를 수정하여 공시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해당 회사가 특별한 이유없이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공시된 재무제표를 회사가 자진하여 수정하는 경우로서, 수정된 금액이 중요성 금액의 4배 이상이거나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수정한 경우
4. 감리집행기관이 법 제26조제1항의 업무(이하 “감리등”이라 한다)를 수행한 결과 재무제표 감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5.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재무제표 감리 대상 회사를 정하여 감리집행기관에 알리는 경우
6. 회사가 영 제15조제5항에 따라 감리집행기관에 재무제표 감리를 신청한 경우
7.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관한 제보(실명으로 제보하는 건에 한정한다)가 접수되거나 중앙행정기관이 재무제표 감리를 의뢰한 경우
8.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이 법에 따른 업무를 제외하며, 이하 제28조에서 “금융회사 검사”라 한다)를 수행한 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가 발견된 경우

② 감리집행기관은 회사가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무제표 감리를 실시하기 전에 재무제표 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가 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당 업무를 종결한다.

③ 감리집행기관은 회사가 제1항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④ 감리집행기관은 재무제표 심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회계처리기준의 해석이 쟁점이 되는 경우에는 그 쟁점 관련 사항을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⑤ 감리집행기관은 재무제표 심사를 실시한 결과가 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여 재무제표 감리를 실시하는 경우에 그 사실을 지체없이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 ⑧ <생략>

제24조(감리등의 방법) ① 감리집행기관은 매년 6월에 다음 사업연도 재무제표 감리 또는 재무제표 심사에서 중점적으로 점검할 업종, 계정 또는 회계처리기준 등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불가피한 이유로 6월 이후에 추가적으로 중점적으로 점검할 사항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회계처리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하여 검토할 수 있는 시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감리집행기관은 감리등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감리등의 대상(이하 “피조사자”라 한다), 관계회사 또는 감사인에 요구할 수 있다.

1. 회사, 관계회사 및 감사인에 요구할 수 있는 사항: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진술 또는 보고
2. 회사 및 관계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 사항: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의 열람 및 업무와 재산상태의 조사

③ 감리집행기관은 제2항에 따른 요구를 하는 경우에 피조사자가 그 요구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피조사자에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요구사항을 미리 문서로 알리면 감리등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구두(口頭)로 알릴 수 있다.

1. 목적
2. 구체적인 요구내용
3. 요구하는 사람의 성명과 직위
4. 그 밖에 피조사자가 제1호 및 제2호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감리집행기관이 정하는 사항

④ 피조사자가 「행정절차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대리인(이하 “대리인”이라 한다)을 조사 과정에 참여시켜줄 것을 감리집행기관에 요구하는 경우에 감리집행기관은 그 대리인을 조사 과정에 참여시켜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증거의 인멸·은닉·조작 또는 조작된 증거의 사용
 2. 공범의 도주 등 감리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
 3. 피해자, 해당 사건에 대한 감리등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 신체나 재산에 대한 침해
 4. 피조사자가 진술 등 조사과정에 협조함으로 인해 소속 회사 또는 회계법인 등으로부터 받는 불이익
- ⑤ ~ ⑦ <생략>

제26조(조치의 유형)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가 법령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임원의 해임 또는 면직 권고
2. 임원의 6개월 이내 직무정지
3. 1년 이내의 증권 발행제한
4. 3개 사업연도 이내의 감사인 지정
5. 경고
6. 주의
7. 시정요구, 각서(회계처리기준을 성실하게 준수하겠다는 확약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출요구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기관이 금융감독원장의 검사결과에 따라 조치를 받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에는 조치의 수준, 성질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

③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이 법령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금융위원회에의 처분건의
가. 등록취소
나. 1년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2. 감사인이 조치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결산일이 도래하는 회사 중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3.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가 있는 날부터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위법행위와 관련된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4. 법 제32조에 따른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추가적립(위법행위와 관련된 회사로부터 받았거나 받기로 한 감사보수를 한도로 한다)
5. 경고
6. 주의
7. 시정요구, 각서 제출요구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

④ 증권선물위원회는 공인회계사가 법령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금융위원회에의 처분건의

가. 등록취소

나. 2년 이내의 직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2. 공인회계사가 조치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결산일이 도래하는 회사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가.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

나. 주권상장법인

다. 대형비상장주식회사

3.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가 있는 날부터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위법행위와 관련된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4. 연간 20시간 이내의 범위 내에서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실시하는 직무연수 실시 의무 부과

5. 경고

6. 주의

7. 시정요구, 각서 제출요구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

⑤ 증권선물위원회는 제4항 각 호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 감사를 담당했던 이사를 주책임자로 하고, 주책임자의 감사업무를 보조한 공인회계사(이하 이 조에서 "담당 공인회계사"라 한다)를 보조책임자로 한다. 다만, 주책임자와 보조책임자를 구별하여 조치를 부과하는 것이 상당히 부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증권선물위원회는 위법행위에 대하여 제4항 각 호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 그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감독을 소홀히 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주책임자에 법 제29조제4항제1호 또는 1년 이상의 전부 직무정지를 내리는 경우: 해당 감사보고서에 서명한 대표이사

2. 주책임자에 법 제29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를 하는 경우: 주책임자의 지시·위임에 따라 담당 공인회계사를 감독하는 공인회계사

⑦ 증권선물위원회는 재무제표 감리 또는 감사인 감리를 한 결과 법 제39조부터 제44조까지에 해당하는 위법행위(이하 이 조에서 "벌칙부과 대상행위"라 한다)가 발견된 경우에는 관계자를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위법행위의 동기·원인 또는 결과 등에 비추어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⑧ 증권선물위원회는 위법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으나 제반 정황으로 보아 벌칙부과 대상행위가 있다는 상당한 의심이 가고 사건의 성격상 수사기관의 강제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7조(조치등의 기준)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감리등을 수행한 결과에 대하여 법 제29조에 따른 조치 또는 고발등(이하 "조치등"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동기
2. 위법행위의 중요도
3. 조치등의 가중·경감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③ 금융감독원장은 재무제표 심사(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를 한 경우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수행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피조사자의 재무제표에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위반사항에 대한 수정공시를 한 경우에 한정한다.

1. 경고
 2. 주의
 3. 내부회계관리제도상 취약사항의 해소 등 위법상태를 시정하거나 다른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권고
- ④ 금융감독원장은 별표 7에 따른 조치등에 관한 기준(이하 이 조에서 “양정기준”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 ⑤ 증권선물위원회는 조치등을 결정하는 경우에 양정기준을 참고할 수 있다.
- ⑥ 증권선물위원회는 양정기준에서 고려되지 아니하거나 양정기준과 다르게 고려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양정기준과 달리 결정할 수 있다.
- ⑦ <생략>

제31조(사전통지) ① 감리집행기관(과징금 부과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금융위원회를 말한다)은 조치예정일 10일 전까지 피조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당사자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이하 이 조에서 “사전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 예정 일시 및 장소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조치등의 내용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조치등의 원인이 되는 사실관계(회계처리기준, 회계감사기준, 품질관리기준, 그 밖에 법령등의 위반에 대한 판단근거를 포함한다)
 - 나. 조치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등
 - 다. 조치등의 내용(감리위원회에 상정될 안전에 감리집행기관이 기재할 내용과 동일하여야 한다) 및 적용기준(위반동기 등을 포함한다)
 - 라. 조치등에 관한 증거자료 목록. 다만, 조치등에 검찰총장등의 고발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4. 제3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안내 및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관의 주소와 연락처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 ③ <생략>

□ 「舊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25조(감리결과의 처리) ① 감독원장은 감리결과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또는 품질관리감리결과 개선권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감리결과보고 및 처리(안)(별지 제10호 서식)을 작성하여 증선위에 상정을 요청한다.

② ~ ③ <생 략>

제25조의2(조치안 작성) 규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결과보고 및 처리안은 부의안 형식으로 작성한다. 이 경우 증선위의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부의안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표 제2호의 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조치안을 기재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① 주권상장법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라 한다)은 그 사업보고서를 각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파산,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사업보고서의 제출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제1항의 사업보고서에 그 회사의 목적, 상호, 사업내용, 임원보수(「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포함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한한다), 재무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60조 (반기·분기보고서의 제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의 사업보고서(이하 "반기보고서"라 한다)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개월간 및 9개월간의 사업보고서(이하 "분기보고서"라 한다)를 각각 그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하되,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재무에 관한 사항과 그 부속명세,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기재하여 작성한 반기보고서와 분기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최초의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에 한하여 그 기간 경과 후 6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59조제2항·제4항·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8.2.29, 2009.2.3>

제164조(조사 및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참고가 될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그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31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대하여 이유를 제시한 후 그 사실을 공고하고 정정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증권의 발행, 그 밖의 거래를 정지 또는 금지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절차 및 조치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1. 사업보고서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업보고서등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제426조(보고 및 조사) ① 금융위원회(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및 제180조를 위반한 사항인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사항이 있거나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자에게 참고가 될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자, 금융투자업 관계기관 또는 거래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별표 1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조사 및 조치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절차·조치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⑥ ~ ⑧ <생략>

제429조(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① ~ ② <생략>

③ 금융위원회는 제159조제1항, 제160조 또는 제161조제1항에 따라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중에 증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형성된 그 법인이 발행한 주식(그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일일평균거래금액의 100분의 10(20억원을 초과하거나 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2. 3., 2013. 5. 28.>

1. 제159조제1항, 제160조 또는 제161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등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때

2. 제159조제1항, 제160조 또는 제161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④ <생략>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은 각 해당 규정의 위반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5년이 경과하면 이를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3. 5. 28.>

제430조(과징금의 부과) ① 제428조 및 제429조(제4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는 과징금부과대상자에게 각 해당 규정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3. 5. 28.>

② 금융위원회는 제428조, 제429조 및 제429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2. 3., 2014. 12. 30., 2017. 4. 18.>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회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4. 업무정지기간(제428조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생략>

④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8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삭제

②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③ ~ ④ <생략>

제444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12. <생략>

1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자 및 그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도 제119조제5항 또는 제159조제7항(제160조 후단 또는 제1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서명을 한 자와 그 사실을 알고도 이를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그 뜻을 기재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가. ~ 다. <생략>

라. 제159조에 따른 사업보고서

마. 제160조에 따른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

바. ~ 사. <생략>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8조(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① <생 략>

② 법 제15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 6. <생 략>
 7. 재무에 관한 사항과 그 부속명세
 8.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9. <생 략>
- ③ <삭 제>
- ④ ~ ⑥ <생 략>

제170조 (반기보고서·분기보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① 반기보고서와 분기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에 관하여는 제168조제1항부터 제4항(제4항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만 해당한다)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68조제2항제7호 중 부속명세는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같은 항 제8호에 따른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제175조(금융위원회의 조치) 법 제16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1년의 범위에서 증권의 발행 제한
2.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
3.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4.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기관이나 수사기관에의 통보
5. 경고 또는 주의

제379조(과징금의 부과기준) ① <생 략>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428조제3항, 제429조 및 제429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15. 6. 30., 2017. 10. 17.>

1.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 등 공시에 관련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의 내용을 계량적 위반사항과 비계량적 위반사항으로 구분하며, 그 위반의 정도는 당기 순이익 또는 자기자본 등에 미치는 영향과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1의2. <생 략>

2. 위반행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정최고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것. 다만,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다.

가. 위반행위가 1년 이상 지속되거나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나. ~ 다. <생 략>

3. 위반행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감면할 것
 - 가. 위반행위의 내용이 중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 위반자가 제출한 다른 공시서류가 있는 경우로서 그 다른 공시서류에 의하여 투자자가 진실한 내용을 알 수 있는 경우
 - 다. 위반행위에 대하여 지체 없이 시정한 경우
 - 라. 위반행위로 인한 투자자의 피해를 배상한 경우
- ③ ~ ⑤ <생 략>
- ⑥ 이 영에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8. 27., 2017. 10. 17.>

제387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43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위임한다.

1. 법 제3편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조사 권한
2. 제1호의 위반행위에 대한 법 또는 이 영에 의한 조치 권한.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조치는 제외한다.
 - 가. 부과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과징금의 부과
 - 나. 1개월 이상의 업무의 전부 정지
 - 다.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폐쇄

② ~ ④ <생 략>

□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제6조 (조사의 실시 등)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법행위의 혐의사실을 발견한 경우
2. 한국거래소로부터 위법행위의 혐의사실을 이첩받은 경우
3. 위법행위에 관한 제보를 받거나 조사를 의뢰하는 민원을 접수한 경우
4. 기타 공익 또는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9조 (조사결과 처리) ① 금융위원회는 조사결과 발견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법 제426조제5항 및 시행령 제37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4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4조 (고발등) 금융위원회는 조사결과 발견된 위법행위로서 형사벌칙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자를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4조(조치기준) 조사결과 발견된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는 별표 제3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상을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제시하고 기준과 달리 조치할 수 있다.

***별표 제3호 증권·선물조사결과 조치기준**

5. 공시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라. 위법행위의 내용이 재무제표의 거짓의 기재 또는 중요한 사항의 누락 등과 관련된 경우에는 위 3.조치기준에도 불구하고 「舊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 제57조에 따른 조치기준에 의한다.(10.4.26. 신설)

□ 「상법」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로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거래소에서 시세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제345조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2.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제341조의2(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41조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4. 14.]

1.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2.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단주(端株)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제341조의3(자기주식의 질취)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20분의 1을 초과하여 자기의 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한다. 다만, 제341조의2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하여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4. 14.]

제622조(발기인, 이사 기타의 임원등의 특별배임죄) ① 회사의 발기인, 업무집행사원, 이사, 집행임원, 감사위원회 위원, 감사 또는 제386조 제2항, 제407조제1항, 제415조 또는 제567조의 직무대행자, 지배인 기타 회사영업에 관한 어느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의 위임을 받은 사용인이 그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1999. 12. 31., 2011. 4. 14.>

제625조(회사재산을 위태롭게 하는 죄) 제622조제1항에 규정된 자, 검사인, 제298조제3항·제299조의2·제310조제3항 또는 제313조제2항의 공증인이나 제299조의2, 제310조제3항 또는 제422조제1항의 감정인이 다음의 행위를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4. 14.>

1. 주식 또는 출자의 인수나 납입, 현물출자의 이행, 제290조, 제416조 제4호 또는 제544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법원·총회 또는 발기인에게 부실한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2. 누구의 명의로 하거나를 불문하고 회사의 계산으로 부정하게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이를 받은 때
- 3~4. <생략>

□ 「기업회계기준서(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실2.26 단기투자자산은 기업이 여유자금의 활용 목적으로 보유하는 단기에금, 단기매매증권, 단기대여금 및 유동자산으로 분류되는 매도가능증권과 만기보유증권 등의 자산을 포함한다. 이들 자산은 현금및현금성자산과 함께 기업의 단기 유동성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개별 표시한다.

2.85 주석은 일반적으로 재무제표이용자가 재무제표를 이해하고 다른 기업과 비교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음의 순서로 작성한다.

- (1)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준거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의 명기
- (2)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
- (3) 재무제표 본문에 표시된 항목에 대한 보충정보(재무제표의 배열 및 각 재무제표 본문에 표시된 순서에 따라 공시한다)
- (4) 기타 우발상황, 약정사항 등의 계량정보와 비계량정보

실2.20 문단 2.85 (3)에 해당하는 보충정보의 예는 다음과 같다.

- (1) 기업의 개황, 주요 영업내용 및 최근의 경영환경변화
- (2) 사용이 제한된 예금
- (3) 자기 또는 타인을 위하여 제공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제공받고 있는 담보 및 보증의 내용
- (4) 차입약정의 유의적인 위반사항
- (5) 천재지변, 파업, 화재, 유의적인 사고 등에 관하여는 그 내용과 결과
- (6) 기업이 가입하고 있는 보험의 종류, 보험금액 및 보험에 가입된 자산의 내용
- (7) 물가 및 환율변동과 같이 기업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불확실성 및 위험요소
- (8) 당해 회계연도 개시일전 2년 내에 결손보전을 한 경우에는 결손보전에 충당된 자본잉여금이나 이익잉여금의 명칭과 금액 및 결손보전을 승인한 주주총회일
- (9) 제조원가 또는 판매비와관리비에 포함된, 급여,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임차료, 감가상각비, 세금과공과 등 부가가치계산에 필요한 계정과목과 그 금액

<제6장 (금융자산 · 금융부채)>

용어의 정의

- 금융상품 : 거래당사자에게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동시에 발생시키는 계약
- 금융자산 : 현금, 소유지분에 대한 증서 및 현금(또는 금융자산)을 수취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금융자산을 교환할 수 있는 계약상의 권리
- 금융부채 : 현금(또는 다른 금융자산)을 지급하거나 불리한 조건으로 금융자산을 교환해야 하는 계약상의 의무

6.4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는 금융상품의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재무상태표에 인식한다.

실6.13 금융부채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멸한다.

- (1) 채무자가 일반적으로 현금, 그 밖의 금융자산, 재화 또는 용역을 채권자에게 제공하여 부채의 전부나 일부를 이행한 경우
- (2) 채무자가 채권자에게서 또는 법적 절차에 따라 부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1차적 의무를 법적으로 유효하게 면제받은 경우(채무자가 보증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이 조건은 여전히 충족될 수 있다)

실6.16 채무자가 제3자에게 지급('사실상 해제'라 함)하였더라도 법적면제의 효력이 없다면, 채권자에 대한 채무자의 1차적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한다.

실6.17 채무자가 의무를 인수하는 제3자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고, 제3자가 당해 채무를 인수하였다는 사실을 채권자에게 통지한 경우에도, 문단 실6.13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채무자는 당해 채무를 제거하지 아니한다. 채무자가 의무를 인수하는 제3자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고 당해 채무에 대하여 채권자에게서 법적면제를 받는다면, 채무자는 당해 채무를 소멸시킨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무에 대한 대가를 제3자에게 지급하기로 제3자와 약정하거나 채무자가 채무에 대한 대가를 최초의 채권자에게 지급하기로 제3자와 약정한다면, 채무자는 제3자에 대한 새로운 채무를 인식한다.

<제14장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14.21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거의 없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 (1) 타인에게 제공한 지급보증 또는 이와 유사한 보증
- (2) 중요한 계류중인 소송사건

<재무회계개념체계>

11. 경영자는 회계기준에 근거하여 진실되고 적정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또한, 회계기준의 허용 범위 내에서 적정한 회계처리방법을 선택하여 이를 일관성 있게 적용하고, 합리적인 판단과 추정을 하여야 한다.

46. 회계정보가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이어야 한다. 회계정보의 신뢰성은 다음의 요소로 구성된다. 첫째 회계정보는 그 정보가 나타내고자 하는 대상을 충실히 표현하고 있어야 하고, 둘째 객관적으로 검증가능하여야 하며, 셋째 중립적이어야 한다.

48. 표현의 충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회계처리대상이 되는 거래나 사건의 형식보다는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거래나 사건의 경제적 실질은 법적 형식 또는 외관상의 형식과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

□ 「회계감사기준」

200. 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수행

15. 감사인은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되게 하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17. 감사인은 합리적 확신을 얻기 위하여, 감사위험을 수용가능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고 이에 의해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여야 한다.

500. 감사증거

6. 감사인은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하여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7. 감사인은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할 때, 감사증거로 사용될 정보의 관련성과 신뢰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A2 감사인이 의견을 형성하기 위한 업무는 감사증거를 입수하고 평가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한 감사절차에는 질문 외에 검사, 관찰, 조회, 재계산, 재수행 및 분석적절차 그리고 경우에 따라 이들이 결합된 절차를 포함될 수 있다. 질문은 중요한 감사증거를 제공하고 왜곡표시의 증거까지도 생성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질문만으로는 경영진주장 수준의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다는 것 또는 통제의 운영효과성에 대한 충분한 감사증거를 제공하지 못한다.

700.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형성과 보고

- 7 이 감사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c) 적정의견 - 감사인이 재무제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작성되었다고 결론을 내릴 경우에 표명되는 의견

- 13 감사인은 해당 재무보고체계 요구사항의 관점에서 특히 다음 사항을 평가해야 한다.

- (a) 경영진이 선택하고 적용한 유의적인 회계정책이 재무제표에 적절히 공시되었는지 여부
- (b) 경영진이 선택하고 적용한 회계정책이 해당 재무보고체계와 일치하며 또한 적합한지 여부
- (c) 경영진이 도출한 회계추정치가 합리적인지 여부
- (d) 재무제표에 표시된 정보가 목적적합하고, 신뢰할 수 있고, 비교가능하며, 이해가능한지 여부
- (e) 의도된 이용자들이 중요한 거래와 사건이 재무제표의 정보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재무제표의 공시는 적절한지 여부
- (f) 재무제표에 사용된 용어(단위재무제표의 명칭 포함)가 적합한지 여부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공정시장과	회계조사국
연 락 처	02-2100-2695	02-3145-7313